노동자 연대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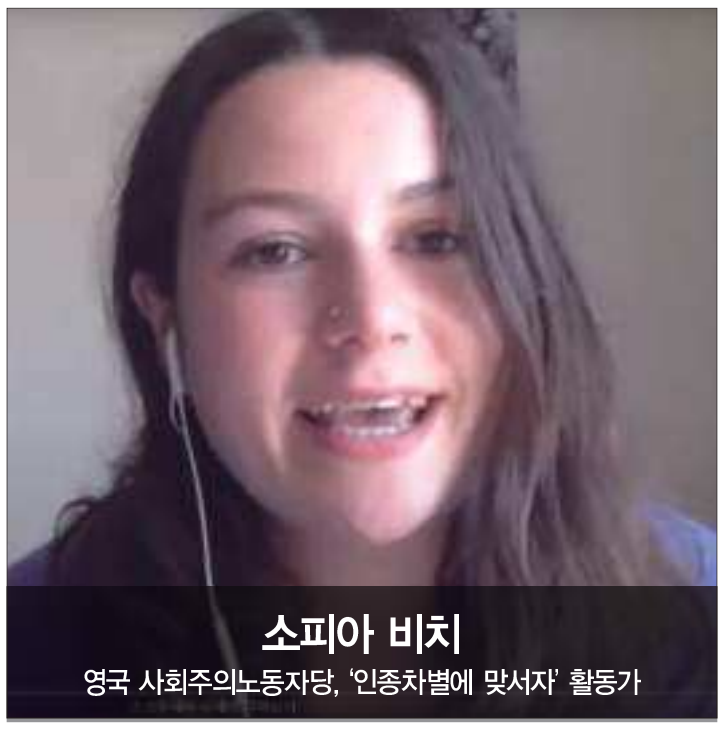
wspaper.org

제328호 | 2020년 6월 25일 ~ 7월 1일 | 값 1,000원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7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사업자 명칭 :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 노동자 연대 발행 연월일(창간호) :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 (주)아이피디 이병동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소피아 비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인종차별에 맞서자' 활동가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독일 디링케(좌파당) 소속 국회의원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와 세계적 저항에 관해

관련 기사 12~15면

조셉 추나라
영국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바바 아이
나이지리아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야니스 델라톨라스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활동가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전쟁이었나? 7~9면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와 세계적 저항② 12~15면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4~5면

문재인이 직면한 난제와 시험대에 오른 개혁주의 3면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인종차별 반대 투쟁 16면

윤미향·정의연 논란 이후 재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6면

데이비드 하비 비판 자본주의를 개혁해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 10면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김현옥
기간제교사 공대위 소속 교사, 전교조 조합원

사진 조승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지원 예산 마련을 위해 교사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6월 2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간제 공대위)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과 임금 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사의 임금을 환수하고 임금 삭감에 앞장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교사자격증 취득 전에 사서, 영양사, 상담사 등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했던 경력 인정률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췄다. 심지어 교육부는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 이미 받은 임금도 빼앗으려 한다. 이로 인해 관련 교사들은 당장 6월 급여부터 최소 100만 원이 깎였고, 앞으로 많게는 2000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토해내야 하는 실정이다.

기자회견에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이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된 것은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8년 동안 인정했던 경력 인정률을 낮춰 투쟁의 성과를 되돌리는 일은 노동존중을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투쟁으로 얻은 성과도 빼앗으려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 "노동존중"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지만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영양교사와 사서교사도 가슴 절절한 사연을 말했다.

"저는 약 8년을 교육공무직으로 일하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기간제 영양교사가 됐을 때 공무직 영양사 경력을 80퍼센트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적용했던 호봉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기간제 경력이 7년 정도인 저는 적어도 1500만 원 이상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급여를 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그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울분

학교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한 학교에 사서교사를 한 명씩 배치한다고 해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기대를 걸었던 한 사서교사는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급한 대로 월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퍼센트를 토해내라니요. 비교과 교사를 무시하고 교육공무직의 경험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교육청 관련자들 모두 문책 대상입니다. 법규정 변경 없이 환수조치는 불법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발언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환수조처 문제는 단지 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비정규직들의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해고하고 저임금의 노동자를 쓰겠다는 것이 비정규직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과 처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값 땡처리 되는 것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은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얼렁뚱땅 눈 감으면서 임금 삭감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교육 당국입니다. 경력 인정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임금 삭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 당국이 교육자의 자부심을 빼앗아 가는 문제입니다." (임병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간제교사뿐 아니라 정규교사들도 함께 참여했다.

기간제 공대위 소속 서지애 초등교사(전교조 조합원)는 이렇게 규탄했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처음에 교원자격증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더니 2014년 법제처와 노동부가 교원자격증이 있는 이들은 기간제법을 적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하자, 시행령을 개정해 오히려 교원자격증만 있고, 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채용 기준에서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즉, 해고한 것입니다. 교원자격증이라는 조건이 당국의 입맛에 맞게 고용을 유연화시키는 무기로 쓰이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교사들에 대한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정규교사도 해당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먼저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소송 준비 수준이 아닌 현장 교사들에 대한 임금 삭감, 환수 조처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학교 안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재앙은 원래 예측보다 더 빠르고 심각할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기후재앙이 기존 예측보다 더 심각할 듯하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기후가 탄소 배출에 더 민감하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농도가 [산업화 이전의 2배로]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오를지 연구한다. 최근 연구들은 섭씨 5도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2014년에 예측한 3도보다 높은 것이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의 요한 록스트롬 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과학자들은 3도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첨단 컴퓨터 등을 동원한 기후 시뮬레이션들의 최근 결과들은 이전 예측보다 더 나쁜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UN 산하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내년에 발간할 차기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다.

이처럼 예측 결과가 크게 나빠진 것은 구름이 기후변화에서 하는 구실을 과학자들이 재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구름은 [지구의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대기 온도를 높힐 수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이런 효과가 [구름이 햇빛을 반사하는 등 다른 효과와 상쇄돼] 전체적으로는 온도를 끌어올리지도 낮추지도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늘어나는 최신 연구들과 첨단 기법의 시뮬레이션들은 구름이 전체적으로 기온 상승에 일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5도로 상승하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세계 도처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폭염, 식량난, 해수면 상승, 기상 이변이 닥치고 그중 상당수는 가난한 나라를 덮칠 것이다.

화석연료 중독을 끊고, 이윤을 위해 지구를 불사르는 자본주의와 결별해야 할 또 다른 시급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사라 베이츠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9호 / 번역 김종환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중국-인도 국경 분쟁: 제국주의 긴장이 고조하는 징후
★ 제국주의 학살자 올브라이트 극찬한 〈경향신문〉 기사 유감

문재인이 직면한 난제와 시험대에 오른 개혁주의

김문성

사진 출처 청와대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배계급도 다시 우경화하고 있다. 문재인 스스로 우향우하는 이유다. 그러나 진보진영을 향한 감언이설은 계속될 것이다

총선 압승 후 기세등등하게 두 달을 보낸 문재인 정부 앞에, 외면하고 싶은 각종 난제가 떠오르고 있다.

당장은 남북 관계 문제가 있다. 6월 24일 북한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안을 보류시켰다. 당장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늦춰진 셈이다. 군 총참모부에게 대남 행동의 행사권을 넘긴다고 밝힌 것은 최근 대남 규탄에 앞장서 온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었다.

16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공개 폭파된 것은 남북관계 파탄을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무소를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말해 왔다. 폭파 이후 조사된 2개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일주일 전보다 5퍼센트 하락했다(한국갤럽 5퍼센트, 리얼미터 4.8퍼센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간 적대 중지와 화해 기조 유지를 최대 치적으로 삼아 왔다. 이는 우파에게 반감을 가진 중도층 · 진보층 다수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 북한에 대한 태도와 별개로 화해 국면이라는 '결과'에 지지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다. 북한 정권 수뇌부는 문재인이 남북 간 협력에 관한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한미동맹(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동참, 연합 군사훈련, 군비 증강, 선비핵화 요구 등)을 우선하며 시간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서방의 제재로 경제가 안 좋은데 코로나19로 중국과의 교역마저 중단돼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북한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은 자신이 먼저 말을 꺼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이미 북한은 "남북간 경제 공동체" 운운한 문재인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노릇"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은 타미플루 같은 인도적 지원도 말만 하고 포기했다. 미국과 조율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냉전 해체 후 미국이 '북한 위협' 과장하기를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이용해 온 것, 최근 미 · 중 갈등이 급격히 고조된 것, 한국 지배자들이 한미동맹에 충실해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키워 온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긴장 국면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듯하다.

폭파될 시점에서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빈 건물이었다. 한 게 없어서 막상 중단될 협력 사업 같은 것도 없는 현실을 빈 건물 폭파가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게 아닐까.

부동산 투기 카르텔 정부

문재인의 지지율은 5월 중순부터 완만한 하락 추세다. 그에 비례해 부정평가는 상승세이다. 6월 들어서는 지지율이 10퍼센트가량 하락했다. 총선 직후 워낙 지지율이 높아서 한국갤럽 조사에선 7주 사이에 16퍼센트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도 아직 50퍼센트가 넘는다.

이는 첫째, 총선 직전 얻었던 반사이익(해외 선진국들의 방역 실패, 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 긴급 소득 지원 반대 등)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그럼에도 여전히 공식정치 내 여야 관계에서 세력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첫째 요인에 관해 말하자면, 코로나19 위기, 경제 침체 등의 문제가 크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5월 등교 개학을 강행하는 등 방역을 완화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었다. 코로나 · 경제 위기 국면에서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가 심각해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22 번째라고 내놓은 부동산 투기 대책이 대표 사례다. 이 대책은 이른바 "갭 투자"(전세가 있는 집을 구매해 전세금과 주택가의 차익만 지불해 집을 사는 것, 보통 돈이 부족한 서민층이 집을 살 때 이 방법을 쓴다)가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며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현금 부자들의 투기는 괜찮고, 당장 살지는 못해도 집을 사놓기라도 하자는 서민층의 재테크는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역풍이 안 불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대체로 협력 기조를 유지해 온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조차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 또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22일)

22번의 투기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고, 부자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지도 않았으며, 서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명박 · 박근혜 정부 9년간 26퍼센트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3년 만에 52퍼센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경제가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노동개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불만이 물밑에서 급속히 자라고 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 하는 점을 두고 정치적 양극화 압력이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둘째 요인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급속한 정치적 위기로 빠져들진 않고 있다. 남북관계 파탄의 징후들이 위기감을 고조시켰지만, 통합당이 무능하고 꼴통스런 이미지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다. 개혁 보수로 혁신을 한다지만, 이미 우파 중심으로 공천해 선거를 치른 마당에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배경 속에서 문재인은 6월 21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제3차 추경예산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재인은 이번 추경예산이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므로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원 구성 합의가 늦어진 탓인데, 문재인이 미약한 추경안으로 생색 내며 우파 야당에 책임을 미룬 것이다.

공수처

새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그 자리를 이용해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신설할 목적에서다. 이를 통해 임기 후반 권력 누수를 막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셈일 것이다. 개별 의원들이 윤석열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한 것은 이런 포석에서다.

물론 여권 수뇌부는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문재인은 22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잘 협력해서 검찰 개혁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당 대표 이해찬도 소속 의원들에게 "윤석열 이름도 꺼내지 마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 중진 의원 김두관의 23일 발언이 본심일 것이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질책 없이 원론적인 말씀만 하신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 … 압박한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압박해서 사퇴하는 모양새도 결코 좋지 않다."

윤석열이 정권의 부패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므로 모양새를 신경써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문재인의 검찰 개혁이 정권 겨냥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 길들이기 하는 것에 불과했음을 떠올린다면, 검찰 개혁 주문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최근 검찰은 라임펀드 환매사태 수사에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불법 로비에 응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삼성그룹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여권에겐 불편한 일이다.

개혁주의의 모순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스트 세력답게 미 · 중 갈등과 남북간 긴장 고조 같은 안보 위기, 코로나19 대응, 경제 침체 등의 난제를 푸는 데서 진보진영과 노동계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코로나19 대응 문제 등에서 그런 도움을 받았었다. 그러나 가능하면 대가는 적게 치르고 싶어 한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지배계급 전반이 다시 우경화하고 있다. 우파 야당에 밀리지 않는 세력관계인데도 문재인이 우파의 요구에 응하는 이유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문재인 정부는 우파적으로 행동해 지배계급을 안심시키려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유용성을 지배계급에게 입증하는 관건은, 진보진영 지도자들을 붙잡아 두고 위기가 체제의 총체적 불안정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말로는 남북관계에서 "달나라 타령"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노동계를 향한 감언이설도 계속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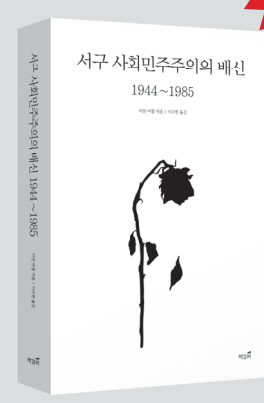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가적 · 국민적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며 노 · 사 · 정 대화에 참여하고 선양보 제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향이 없다. 기업주들이 양보 의사가 없기도 하지만, 위기의 규모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선양보 수준에 기업주들이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주에게 20이라도 양보(개혁)를 얻어 내려면, 대중 투쟁으로 그들이 50, 100을 잃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수밖에는 없다. 사회적 대화로는 이런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의당 지도부가 노조 지도자들의 선양보 제안을 환영한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

남북사무소 폭파 후 민중당과 민주노총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옳게 비판하며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반성하고 잘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다. 정의당도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하고 외교 · 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대체로 남북 양비론 정도에 그쳐 남한 정부를 압박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위기가 빠르게 심화하면서 여권과 진보계 지도자들의 관계가 지난해까지처럼 그럭저럭 순탄하지만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진보계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맞설 태세가 돼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한다 해도 관성이 작용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체제의 위기가 체제의 진보와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세력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개혁주의적 지도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신간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이언 버철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472쪽, 20,000원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김영익

사진 출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이 공개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니미츠함의 훈련 장면

6월 24일 오전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비무장지대(DMZ)에서 사흘 전부터 설치 작업 중인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들도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6월 들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던 와중에 잠시 멈춤이 일어난 것이다. 일주일 전에만 해도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북한 당국은 청와대의 특사 파견 제안도 거절하고, 연속적인 군사 행동을 예고했었다. 남북관계가 과거 대결 상황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김정은의 보류 지시로 일단 북한의 추가 조처는 미뤄지게 됐다. 급고조되는 듯하던 긴장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긴장 상황이 다 해소된 것인가? 남북관계에서는 긴장이 크게 높아지다가 갑자기 국면이 전환되는 상황이 왕왕 벌어졌다. 그러나 유화 국면 속에서 긴장이 다시 축적돼 새로운 위기로 이어지곤 했다.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를 불안케 하는 근본 원인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한미워킹그룹

이번 남북관계 파탄 상황은 미국 · 한국 정부들에 주된 책임이 있다.(〈노동자 연대〉 제327호 관련기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미국 · 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를 보라.) 2018년 남 · 북/북 · 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미국과 한국은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주로 이런 상황이 북한의 반발을 일으켰다.

어려운 내부 사정도 북한 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코로나19 위협을 차단하려고 국경을 막으면서 경제 지표들이 더 악화됐고, 식량 사정도 더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을 미국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도훈은 북한의 반발을 부른 '한미워킹그룹'의 한국 측 대표다. 이도훈이 미국에서 만난 인물은 미국 측 한미워킹그룹 대표인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비건이었다.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린 주요 조처 하나가 한미워킹그룹 채널 가동이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 함을 보여 준다.

한미워킹그룹은 트럼프 정부가 남북관계에 간섭해 속도 조절을 요구해 온 통로였다. 미국은 이 통로를 이용해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 연결,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서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북한 당국이 한미워킹그룹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까닭이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한미워킹그룹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해체 요구를 일축했다.

트럼프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의 회고록을 반박하는 것 말고는 남북관계 파탄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 기성 정치권과 언론들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대선을 앞둔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여기는 듯하다.

사실 트럼프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 · 미 관계에 대한 관심 표명을 점차 줄여 왔다. 올해 초 미국 의회 국정연설에서 트럼프는 예년과 달리 북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이런 태도는 역대 미국 정부가 취한 "악의적 무시"와 똑같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6월 17일 트럼프는 북한의 핵 · 미사일 프로그램이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같은 날 미군의 B-52 폭격기가 동해에서 일본 항공 자위대와 연합 작전을 펼쳤다. 이는 북한에 매우 위협적인 행위였다.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 데이비드 헬비는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6월 22일 미군은 항공모함 2척을 대

▶ 5면으로 이어짐

북한의 '도발'에 주목하는 사회진보연대의 견해

현재의 남북관계 긴장을 살펴볼 때, 반제국주의적 관점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돼, 일부 좌파 단체처럼 북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데 주목하게 된다.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을 내어 북한 정권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했다. "이런 비상식적 처사"가 한반도에서 일련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위기들을 돌아보면,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사태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부적절한 물음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이 일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경쟁이 점증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제국주의적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하며 북 · 미 관계를 다뤄 왔고, 북한을 압박해 왔다.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핵개발이 "동기도 반민중적이며, 그 결과도 파멸적"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핵무기는 반제국주의 국제 연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세계 최강 미국과 그 강력한 동맹국들이 중간 규모의 공업국 북한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제재와 군사 위협을 가한 것이 낳은 반작용이다.

따라서 북 · 미 관계를 말할 때는 북한 핵을 원인 제공자로 말할 수가 없다. 일의 선후 관계를 따진다 해도 대북 압박과 제재가 먼저였지 핵개발이 먼저가 아니었다. 게다가 상대도 안 되는 무력 경쟁 구도에서 약한 국가가 최강대국을 상대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핵 · 미사일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력 증강 움직임을 보면 사실 북한은 명함도 못 내밀 처지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맺은 핵군축 조약들을 완전히 무시하며 핵무기 증강에 나서 왔다. 트럼프 정부가 실전에 사용 가능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서태평양 일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불안케 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그래서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북한이 핵무장에 집착하는 이유의 하나로 한반도에서 미군과 남한군대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군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런 상황에 의해 북한 당국은 압박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과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지만 사실 한국이 북한보다 공격용 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최신예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급 공격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 북한은 그런 수준의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양비론적 태도도 문제이다. 정의당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북 정책"에 실망감을 표하며 외교 · 안보 라인 쇄신 등을 요구하면서도, 북한이 "무모한 협박" 행위를 한다며 양비론적 태도를 취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핵 · 미사일 개발 같은 북한의 '무모한' 행위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슷한 비중으로) 비판해야 현재의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지지에 의존하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더 높아질수록 북한을 더 비난하고 남한 정부의 안보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후진적 압력에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그런 입장은 한반도 불안정을 끝내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주력해야 하는가를 흐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동맹에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다.

사진 조승진

6월 20일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국워킹그룹 해체와 남북관계 발목 잡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 4면에서 이어짐

만에 보내어 훈련에 돌입했다. 기존의 1척을 포함해 지금 총 3척의 미군 항공모함이 한반도 남쪽 해상에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주로 중국을 겨냥한 조처로 보인다. 올 초 미군 항공모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서태평양에서 미군 항공모함 전력에 공백이 잠시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 항모가 3척이나 동시에 한반도 남쪽 해상에 있는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의 메시지로 읽혔을 것이다. 그 후에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은 지금까지의 조처로 북한 정권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됐다고 봤기 때문일 듯하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남 · 북/북 · 미 간에 대화가 재개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는 북한을 다시 자극하며 맞대응을 낳을 것이다. 김정은의 "보류" 결정으로 마냥 안도할 수 없는 까닭이다.

치적

한반도에서 긴장이 불거지는 와중에 존 볼턴의 회고록이 나왔고, 트럼프는 이를 공개 반박했다.

회고록에서 볼턴은 트럼프가 2018년 싱가포르 북 · 미 정상회담을 "홍보 활동"으로 치부했고, 비핵화의 세부 사항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볼턴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에게 싱가포르 회담은 "언론에 보여 주기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는 알맹이가 빠진 공동성명에 서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바로 떠날 준비가 돼 있었다. 여의치 않으면 이후에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도 했다.

물론 대북 선제 폭격과 '리비아 모델' 따위를 거론하며 북한을 적대해 온 볼턴이 2018년 북 · 미 대화 과정을 공정하게 서술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가 북 · 미 정상회담에 나선 주된 동기가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었음은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이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최근에 북한 외무상 리선권은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2018년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트럼프가 내민 손길을 잡았다.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 지속에 실망하고 "배신"당했다고 하면서도, 한동안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의 "친분 관계"를 언급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북한 당국이 핵 · 미사일을 보유하고서도 북 · 미 대화에 기대를 건 것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인정받고 주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냉전 구도 해체 이래 북한 당국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제재를 풀고 고립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 안착하기를 열망했다. 이런 전략은 대를 이어서 계승돼 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접근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미국 · 남한 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또 실패하게 됐다.

2018년 남 · 북/북 · 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진행되자, 정의당 · 민중당을 비롯한 주요 진보 정치 단체들은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아 정상회담을 지지했다.

이런 상황인식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긍정적 구실을 한다고 보고 거기서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갔다.

지난해 여름 한 · 일 갈등이 불거지자, 주요 진보 · 좌파 조직들은 이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소외된 일본의 대응이라고 봤다. 이런 피상적인 '일본 패싱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의 강경 태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으로 정세가 바뀌는 데 대한 (미국과 일본의) 견제라는 시각이 강했다. 예컨대 민주노총 집행부는 한 · 일 갈등을 '미 · 일 패권전략과 한반도 중심의 평화체제 전환이 부딪히는 상황'으로 이해했다.

진보진영의 주요 조직은 아니지만 사회변혁노동자당의 한 간부도 당 기관지에 "한반도-동북아 정세 변화[가] 아베 정부의 강경 대응을 부추겼다"고 썼다.

그러나 남 · 북/북 · 미 정상회담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대중의 기대를 배신했다. 이는 미국에 종속돼 한반도 문제에서 결정권 없이 미국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비록 한국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에서 주된 플레이어는 못 되지만,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은 과거와 비교하면, 제국주의 세계 체제 안에서 그 나름의 이익을 추구하고 종종 이득도 보고 대접도 받는다.

그래서 그 지배계급의 정치 세력으로서 문재인 정부는 친제국주의 · 군국주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의 정치

남북간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6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에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분별없는 행동을 고집스레 밀고간 것이다. 북한이 이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불안함을 느끼며 항의해 왔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한 단체는 6월 21일 강화군 석모도에서 하겠다던 대북 쌀 페트병 띄우기 행사를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두둔하는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똑같이 분별없다. 그런 행태는 위선적이기도 하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한 적이 있으니 말이다.

정부 · 여당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 한다. 현 상황이 더 위험한 수준으로 번지지 않게 통제하기 위해서이지만, 동시에 현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깔린 듯하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법인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 6월 19일 경찰청장 민갑룡은 경찰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 5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대북전단은 살인 부메랑"이라며 행정명령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23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자민통계 좌파 단체들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북전단이 대북 심리전으로서 미국이 부추긴 "전쟁 행위"이고,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2018년 남북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가가 수행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전 행위와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구분돼야 한다. 그 파급력 면에서 후자는 전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 남한 정부들이 행하는 적대 행위와 민간단체들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동급의 위협으로 놓을 수는 없다.

설사 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더라도, 우파들은 새로운 선전 수단들을 찾아낼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쉬먼 회장은 대북전단보다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분명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좌파가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의 그런 통제는 좌파 측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금지는 좌파 쪽을 향해 되튕길 수 있다. 대북 접촉에 대한 정부 통제가 정당화되고, 정부가 보기에 '문제적인 접촉'은 경찰력으로 막고 처벌돼야 한다는 논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국회에 발의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들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 주민과의 회합 · 통신 등을 통일부 장관에 사전 신고하라고 한 조항(제9조의2)을 강화하거나, 통일부 장관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남북 간 반입 · 반출 물품(제2조)에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남북 간의 자유로운 민간 교류를 제약하는 법률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좌파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완전한 자유 왕래는 당장에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남북 민간 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되는 게 우파들의 대북전단 이 설 입지를 줄여 줄 것이다.

'반평화 반통일 적폐 세력들'이 준동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훼방 놓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좌파는 이런 문제에서 대중의 힘에 의존하는 게 좋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맞불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연대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사진 출처 파주시

6월 19일 통일로 직판장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

윤미향·정의연 논란 이후 — 재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김승주

6월 6일 사망(자살 추정)한 채 발견된 고 손영미 마포 쉼터 소장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길원옥 할머니는 손 소장이 죽기 전까지 함께 마포 쉼터에서 생활했고,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아 왔다.

의혹은 현재 길원옥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 황선희 목사에게서 나왔다. 황 목사는 길원옥 할머니가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 온 양아들로, 현재 인천시 연수구의 한 교회에서 일한다.

황 목사에 따르면, 고 손 소장은 검찰이 마포 쉼터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불안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들을 황 씨에게 넘겨줬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나오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입금되는 통장이었다. 그런데 이 계좌들에서 뭉칫돈이 지속적으로 빠져 나간 흔적이 있었다. 이를 고 손 소장에게 추궁하자 손 소장은 매우 곤혹스러워했고, 결국 사흘 뒤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의혹의 진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의혹은 다른 돈도 아닌 피해자의 생활지원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다. '나눔의 집' 부정 의혹이 커다란 공분을 산 것도 피해자 생활 지원 몫의 돈을 가로챘다는 것 때문이었다.

수요집회에서 모금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 많은 사람들은 후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 생각했다

사진 이미진

모금이나 지원은 목적을 분명히 한 뒤, 명목에 맞게 써야 한다

돈 문제는 (운동 전략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임에도) 윤미향 · 정의기억연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도 '학생들이 한 푼 두 푼 내서 모은 수요집회 성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성토에서 시작했다.

돈의 출처와 용처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더 구체화하면, 돈을 모을 때부터 용도와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고, 쓸 때는 그 용도와 명목에 따라 투명하게 써야 한다.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정의연은 초기에 이렇게 해명했다. "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생활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닙니다. …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전시 성폭력의 개념을 세우고 확신시켜온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5월 11일 정의연 기자회견)

그러나 정의연 웹사이트 단체 소개란에는 정의연의 첫번째 "미션"(임무)으로 "피해자 지원"이 명시돼 있다. 후원 참여란에는 후원금이 수요 집회, 국내외 활동, 마포 쉼터 운영 그리고 "생존자 복지를 위한 활동"에 쓰인다고 명시돼 있다.

모금의 명목이 이것 저것 섞여 불분명했던 것이다. 그래 놓고 논란이 되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아니"라고 하니, 그간 정의연에 후원해 왔던 사람들이 기만당했다고 느낄 만하다.

비슷한 문제는 김복동 장학금에서도 드러난다. 비영리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은 고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할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재일동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웹사이트 후원회원 모집란에는 재일동포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내용만 밝혀져 있다.

그러나 정의연은 그렇게 모인 후원금과 김복동 할머니의 유산을 섞어 재일동포 학생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모호한 명분으로 말이다.

후원금 명목과 쓰임이 다른 문제는 안성 쉼터 의혹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의연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쉼터 매입비 10억 원을 기부받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하는 매주 1회 목욕탕 가기, 주치의 방문 치료, 서예 · 노래 등 치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런 명목과 달리 안성 쉼터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살지 않았고, 그 대신 윤미향 씨나 그 남편과 가까운 단체 · 개인들에게 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안성 쉼터는 국가보조금을 받았고 이 돈은 이 곳을 관리하던 윤미향 씨 아버지의 급여로 지급됐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건물을 턱없이 비싼 값에 매입한 과정에 윤미향 씨의 남편과 안성시 민주당 의원 이규민(당시 안성신문 대표)이 연루돼 있어 더욱 께름칙하다.

윤미향 씨와 정의연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회계 미숙 문제일 뿐, 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은 지원 받은 명목대로 돈을 썼냐는 것이었다. 초기부터 계좌 내역을 공개하자는 요구가 나왔던 까닭이다.

운동 건설을 위한 활동 비용은 피해자 생활 지원과 달리 독립적 재정 마련 원칙에 더 엄격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금과 운동 건설 비용은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잔혹했던 위안부 피해 때문에 심신의 병을 안고 살거나 가족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할머니들이 여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은 꼭 필요하다. 그것도 넉넉한 액수로 말이다. 자신의 뜻에 어긋나게 강제로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해 주는 마음으로 말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싶어서 후원금을 낸다. 몸과 마음에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후원금은 당연히 그 명목대로 돈이 쓰여야 한다. 그러나 나눔의 집은 이 돈을 노골적으로 빼돌려 수사 대상이 됐고, 정의연 의혹에도 부분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지원에는 일반 시민의 성금 외에 정부 지원금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주는 돈과 정의연 · 나눔의 집 등 관련 단체에 피해자 지원 사업 명목으로 주는 돈으로 나뉜다.

사실 국가의 직접 지원이 일관되고 잘 돼 있었다면 엔지오들을 통한 피해자 지원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기업도 이미지 세탁을 노리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곤 한다. 안성 쉼터와 마포 쉼터가 그런 사례다. 전자는 재벌인 현대중공업이, 후자는 메가처치(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당회가 각각 10억 원, 15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했다. 명성교회는 별도로 건물 관리비(매달 150만 원)도 지원했다고 한다.

이런 대기업 지원은 받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옳을 것이다.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살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국가에게 직접 지원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대국민 모금을 호소하고 조직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정의연이 '피해자의 거처를 급히 구해야 하는 사정'으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는 만큼, 불가피한 사정을 매몰차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대중적 모금 호소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단체들은 용도에 맞는 모금과 투명한 지출 공개로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새겨야 할 것이다.

돈은 정치다

그러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 비용 마련은 다르다.** 피해자 생활 지원처럼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므로, 투명한 쓰임만이 아니라 출처와 용처 모두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쓰이는 돈은 어디에서 구해 와서 어디에 쓰는지가 모두 정치적 문제다. (관련 기사 본지 323호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①: 부정의 본질적 성격은 무엇인가')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와 한국 국가, 나아가 이런 질서를 뒷받침하고 촉구해 온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투쟁 대상들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은 매우 중요하다.

운동의 대의를 폭넓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에 대한 동의에 기초해 활동 비용을 아래로부터 모으는 과정은 운동의 정치적 독립과 건강성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다. 손쉽게 정부나 기업의 후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운동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활동비와 지원금 마련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에게서 타오는 돈으로 정부와 기업에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엔지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확대한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이후 개혁주의적인 엔지오의 정부 견제 · 비판 기능이 급격하게 둔해진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시민단체 지도자 출신으로 부통령급이라는 서울시장을 9년째 하고 있는 박원순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토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엄청나게 힘든 회원의 개발과 회비 증대를 위한 노력보다는 일거에 거액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 대부분의 정부 프로젝트가 3천만 원 이상인데 회비 1만 원을 내는 회원 250명을 확보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 서명을 받고 뛰"는 일은 "하나의 시련이며 형벌이다."(《한국의 시민운동–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2002)

따라서 윤미향 · 정의연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된 돈 문제는 운동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전략 문제에 비추어서 봐야 한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회계 부실이나 개인의 일탈(위법 행위)로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김동철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공저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 답을 얻기 위해 70년 전 평범한 대중의 삶을 처참히 파괴한 한국전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미래통합당과 우파들은 한국전쟁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한국전쟁 문제에서는 미래통합당과 별 차이가 없다. 그들도 한국전쟁이 북한의 침략에 맞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17년 미국에 가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강조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남북 대화를 말하지만 실천에서는 대북압박 · 군사훈련 · 무력증강에서 미국과 행동을 같이해 왔다. 최근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강경하게 비난하고 나서고 한반도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강철과 같은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미국에 감사를 전했다. 사실 우파와 민주당 그리고 한미동맹의 틀에서 부를 쌓은 자본가들 등 한국 지배자들에게 미국은 한국 자본주의를 지키고 급속히 자본축적을 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혈맹'이다.

하지만 한국 지배자들이 그토록 고마워하는 미국이 한국전쟁 동안 저지른 일만 보더라도 한국전쟁이 자유나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문재인의 말처럼 '인류애'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전쟁 범죄자였다.

대량 학살

한국전쟁 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을 자행했다. 이 결과 북한은 '달의 표면처럼' 변했다고 할 만큼 파괴됐고 대량 학살이라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제2차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전체에 투하된 폭탄의 총량이 50만 3000톤이었는데 한국전쟁에는 63만 5000톤이 투하됐다. 여기에 3만 2000톤 이상의 네이팜탄이 더해져야 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악명 높았던 네이팜탄의 파괴적 효과는 베트남보다 한국전쟁에서 훨씬 더 강했다. 북한에 인구가 조밀한 도시와 도시 산업 시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950년 11월 8일 70대의 B-29가 신의주에 네이팜탄 550톤을 투하해서 도시를 지도에서 지웠다고 할 만큼 불태워 버렸다. 550톤으로 한 도시를 지도에서 지울 정도였다면 3만 2000톤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또한 미군은 네이팜탄과 함께 지연 신관이 달린 폭탄을 투하했는데 네이팜탄의 희생자들을 수습하러 사람들이 나왔을 때 터지는 폭탄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 도시 60곳이 평균 43퍼센트 파괴된 반면, 북한은 도시와 마을의 40~90퍼센트가 파괴된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한으로 봐도 북한 주요 도시 22곳 중에서 18곳은 절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폭격은 끊이지 않았다. 1953년 5월에 미군은 식량 생산에 타격을 가하고 기아를 유발하려고 북한 댐 여러 개를 파괴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댐 파괴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자행한 대표적 전쟁 범죄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여러 차례 고려했다. 1951년 4월 초에는 거의 실행할 뻔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1951년 4월 6일 중국과 북한의 표적에 핵폭탄을 사용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1951년 9월과 10월에 미군은 '핵무기 사용 역량을 확증'하려고 북한 상공에서 핵폭탄 투하 연습까지 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이런 무자비한 짓은 이후 베트남과 이라크 등지에서 계속됐다. 미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와 평화 운운하는 것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전쟁은 보여 준 것이다.

1950년 평양 미국의 폭격으로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는 부적절한 질문이다

우파들은 북한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이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했나?'에서 전쟁의 성격을 찾아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 연구의 권위자인 브루스 커밍스가 잘 지적했듯이, 미국 내전(남북 전쟁)에서 남부군이 섬터 요새에 먼저 총을 쐈다는 사실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세력들이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정책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가 중요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먼저 시작했다는 점이 베트남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더라도, 베트남 전쟁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듯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전쟁의 성격 규정과 그에 대한 태도에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 8면으로 이어짐

▶ 7면에서 이어짐

한국전쟁은 제국주의적 경쟁의 결과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 두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의 경쟁이란 맥락 속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전쟁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 영국, 소련 등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은 국제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국제연합(UN)을 결성했다. 하지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약속한 국제연합헌장이 채택된 그날로부터 정확히 5년 후 바로 그 날짜에 한국전쟁이 시작됐다.

양차 대전의 원인이었던 제국주의 간 경쟁은 이제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하는 경쟁 구도 양상을 띠었다.

제2차세계대전 때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만 2000만 명 이상을 잃었지만, 유혈 낭자한 전쟁에서 살아남아 종전 무렵에는 중동부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소련의 세력 확장을 자신이 관리하는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여겼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점점 가열돼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이 공식화된다.

제국주의 경쟁이 냉전이라는 형태로 양극화하면서 어떤 점에서 이 대결은 전보다 더 격렬해졌다. 왜냐하면 양 진영이 서로 상대방을 단지 라이벌로만 여기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적수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은 점령지에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남한과 북한의 정부는 그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탄생한 남과 북의 정부는 달려나가서 서로 물어뜯고 싶어 안달이 난 투견과도 같았다.

1948년 북한 정부 수립 이후에 김일성은 '국토완정'을 내세우며 무력 통일 의지를 불태웠고, 이승만도 북진통일을 부르짖으며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38선에서 선제공격을 했다. 1950년 6월 25일이 (전면전의 시작이 아니라) 유격전과 국지전의 끝임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양측의 충돌은 빈번했고 사상자도 많았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남과 북 사이의 충돌의 근본 동력은 미국과 소련의 제국주의적 경쟁에 있었던 것이다.

이미 한국전쟁 이전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특히 유럽에서 커지고 있었다. 독일에서 특히 1948~1949년 베를린 봉쇄로 불린 충돌이 불거지자, 미국은 한때 핵무기 동원도 심각하게 고려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전부터 대소련 봉쇄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럽에서 진행한 마셜플랜과 일본의 '역코스'가 그 사례였다.

마셜플랜은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경제 봉쇄 정책이었고, 일본에서 역코스는 일본을 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과 1949년 중국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삼기 위한 조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미 군정청이 독과점을 해체하려던 초기 정책을 뒤집어서 대기업 집단들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 국가 관료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냉전의 격화

1949년 8월 소련이 핵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그러자 미국은 자신의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1950년 봄에는 방위군사비를 3배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문서인 NSC-68을 내놓아 본격적인 군비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 이들을 후원한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했다. 중국혁명의 승리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힘이 커져서 전쟁으로 나갔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사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소련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익 실현을 최우선시 했는데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스탈린은 중국이 분열해 약한 중국으로 남아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물리치고 중국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스탈린의 구상과 달리 중국공산당은 중국대륙에서 국민당 군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다. 소련은 중국이 자신의 턱밑에서 덩치 큰 적대 국가가 되거나 마오쩌둥이 '아시아의 티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후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에는 미국과의 경쟁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경계도 반영됐다.

스탈린은 중국을 일방적인 속국처럼 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영향력이 유지되기를 원했는데, 미국에 대한 강경정책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 이런 맥락에서 스탈린은 일본공산당에게 미군정에 대한 강경 투쟁을 촉구하고 김일성의 전쟁 개시 요청을 승인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내 소련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소련에게 될 수록 많은 경제적 · 군사적 지원을 얻어내고 싶어했다. 중국은 내전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복구하고 대만을 정복하기 위해 소련의 공군 지원을 상당히 중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는 적대 관계(직접 충돌을 포함해)가 되겠지만 당시 중국의 처지에서는 냉전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배자들은 중국혁명의 승리에 자신감을 얻었다. 마오쩌둥은 중국혁명에 참전한 조선인 부대를 대거 북한에 보내 줬는데, 이 부대들이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 주력 부대를 형성했다. 이것이 중국 내전에서 북한의 도움에 대한 보답(의리)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의 동북 지역을 방위하는 전초기지로서 북한이 구실해 주길 원했다. 중국은 아직 죽지 않은 장제스와 미국이 한반도를 통해 중국 대륙으로 침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일성이 마오쩌둥과 스탈린 사이의 긴장을 이용해 스탈린에게 한국전쟁의 승인을 얻어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국주의 경쟁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시각이다. 김일성과 이승만은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경쟁이라는 큰 장기판에서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전쟁을 통해 냉전은 실제 열전으로 이어졌다.

① 1951년 7월 미 공군 B-26 전폭기의 원산 시가지 폭격 모습
② 맥아더와 이승만
③ 1949년 3월 김일성(가운데)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전쟁 개시를 요청했다. 김일성이든 이승만이든 상대방을 향한 적의에 가득차 있었다
④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보도연맹원 학살로 적어도 10만 명이 죽었다
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몰래 도주하며 한강철교를 폭파해 그 자리에서 피난민 수백 명이 죽었다
⑥ 인천상륙작전 중인 미군. 이후 미국은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했다

전쟁의 전개과정

제국주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분출하다

전쟁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쟁 초기(6월 말에서 7월에 걸쳐)에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 8월에는 낙동강 부근에서 참호전의 양상을 보이다가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돼 압록강 부근까지 미군이 밀고 올라갔다. 그러나 10월 25일 중국군이 개입해 다시 전선이 내려와 38선 부근에서 전쟁이 고착 상태에 빠져 2년을 더 끌다가 정전에 이르렀다.

전쟁의 과정은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쟁 개시부터 10월 25일 중국군이 개입해 첫 전투를 벌이기 이전 시기(전쟁 초반 4개월)와 이후 시기다.

중국군의 개입 이전에는 주로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 · 한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중국군이 개입한 이후에는 미군 주도 유엔군 · 한국군과 소련 공군 지원을 받는 중국 · 북한 연합군(중국군이 주도했다) 사이의 전투였다.

전쟁 초기 미국은 김일성의 예상과는 달리 신속하게 개입했다. 미국 공군은 6월 27일 폭격을 시작했고, 1950년 6월 30일 오전 트루먼은 미국 육 · 해 · 공군 부대의 전면적인 한국전쟁 개입을 제안한 맥아더의 요청을 승인했다.

북한군은 전쟁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개입으로 이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다. 특히 미군의 제공권 장악은 북한군의 전진을 상당히 더디게 만들었다.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은 북한군 점령 하의 남한지역 도시와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폭격을 벌였다. 1950년 9월 서울 수복 후 한국 공보처 통계국은 6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울지역 사상자를 조사했는데 공중폭격으로 인한 것이 42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군은 흰 옷을 입은 민간인 무리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비행기에서 기관총 사격을 가했다. 미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노근리 사건'은 이런 과정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노근리 사건'은 결코 '특수한' 사례가 아니었다. 미군은 민간인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다.

미군은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 4개월 만에 북한군을 압록강 근처까지 밀어붙였다. 미군은 중국군과의 충돌의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어 중국 국경 근처로 진격했다. 이 시점에서 중국군과 소련군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산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이고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한 중국 동북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중국군은 10월 25일 미군과 첫 전투를 벌였고 11월 1일에는 처음으로 소련 공군(중국군으로 위장했다)이 압록강 상공 교전에 참가했다. 특히, 중국군의 참전으로 미군은 지상전에서 굴욕적인 참패를 겪고 남쪽으로 후퇴해야 했다.

한국전쟁은 전쟁이 시작된 휴전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고 2년이 지난 후에야 끝날 수 있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힘으로 적을 완전히 제압해 통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서로가 조금이라도 우월한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길 바랐기 때문에 전쟁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지만 그 배경에는 제국주의 사이의 투쟁이 있었다. 한쪽 제국주의(미국)가 전면 개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쪽 제국주의(소련과 중국)가 개입했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지역적으로 제한적이긴 했지만 실제 제국주의 사이의 충돌로 발전한 사실상 제국주의 전쟁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

전쟁의 결과와 진정한 교훈

전쟁의 결과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됐다. 1000만 명이 가족과 헤어졌고 500만 명이 난민이 됐다. 한 역사가가 말한 것처럼 한국전쟁은 '죽임과 절망의 역사'였다.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한국전쟁이 '고맙고도 기다리던 전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군비를 대폭 증가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쟁을 미국이 일부러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잘못일 것이다. 한국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제국주의 경쟁의 산물이었고 역으로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는 구실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은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계속됐고 그 사이 미국과 소련 지배자들은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축적했다.

미국과 소련 양쪽 모두에서 획일적인 이념이 강요됐다. 서방 진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웠고 동방 진영은 '사회주의'를 내세워 억압적인 착취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방의 첩자로 몰아 탄압했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해 미국과 충돌하면서 대만해협이 냉전의 전선으로 굳어지게 되고 중국은 우선적 과업인 '대만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전쟁 이전 신장 지역을 점령했으며 한국전쟁 개입과 함께 티베트로 군대를 진군시켰다. 또한 한국전쟁 동안 중국은 외부의 위협을 내세워 내부의 억압을 강화하고 급속한 자본축적을 위한 지배 체제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소련과의 냉전이 본격화되고 중국혁명이 성공하면서 자신이 후원하던 국민당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소련 봉쇄정책을 강화했다. 한국전쟁에 신속하게 개입한 것도 '반공의 전초기지'인 한국이 소련 진영의 손에 넘어갈 경우 아시아에서 서방 진영의 주요한 산업 경제인 일본까지 위험해질

▶ 10면으로 이어짐

한국전쟁의 기원

한국전쟁과 관련한 논의들 중에 단연 중심에 있는 것은 전쟁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것이다.

전통주의는 미국과 남한 지배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국전쟁이 팽창주의와 공격적 본성을 가진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을 하수인으로 삼아 벌인 전쟁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전쟁을 했고 참혹한 전쟁의 책임은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수정주의이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베트남 전쟁 반대 등 급진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논자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브루스 커밍스(이하 커밍스)다.

1980년대에 나온 《한국전쟁의 기원》과 이후 여러 저서들을 통해 밝힌 그의 주장은 한국전쟁과 관련한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그는 한국전쟁이 기본적으로 내전이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전쟁의 기원은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형성된 계급 간 갈등과 함께 항일 세력과 친일 세력 사이의 갈등이 해방 이후로 이어졌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국이 한반도 남쪽을 점령해서 친일 · 지주 세력을 지지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면서 많은 충돌과 학살이 벌어졌다. 그래서 일제 시대에 형성된 모순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진정한 독립과 해방을 원하는 아래로부터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공장 자주관리 운동이나 각 지역 인민위원회들의 등장은 이런 분위기의 표현이었다.

미 점령군은 대중운동과 그 조직을 파괴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그 대표적 사례다. 1948년 2월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이미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됐다. 이 기간에 제주 4 · 3항쟁에 대한 잔인한 진압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등장한 남쪽 정부는 진정한 해방과 독립을 원하는 대중의 열망에 적대적이었을 뿐 아니라 소련이 점령해 북쪽에 수립한 정부에도 적대적이었다.

반면 커밍스는 북쪽에서는 남쪽과 달리 항일 세력이 권력을 잡았고 토지 개혁도 이루었다고 봤다.

그래서 커밍스는 남쪽에서의 지주와 농민 사이의 그리고 친일과 항일 세력 사이의 대립과 투쟁(커밍스의 표현에 따르면 작은 전쟁)이 남북 사이의 전쟁(큰 전쟁)으로 확대됐다고 봤고 그래서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했다.

커밍스의 주장은 명백히 장점이 있다. 그의 주장은 한국전쟁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미국과 남한 지배자들의 주장에 대한 분명한 반박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미국, 소련 어느 쪽도 자유와 해방과는 거리가 멀었다 1945년 전후 세력권 분할을 위해 알타회담에 모인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

북한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커밍스가 가정하듯이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나은 사회였던 것은 아니다. 남쪽을 미군이 점령한 것처럼 북쪽도 소련군이 점령했고, 소련도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커밍스는 소련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 '분명한 계획이나 미리 결정한 행동 방침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소련이 어떤 전략적 의도 없이 북한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도 미군과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운동을 억눌렀다. 소련군이 발표한 첫 포고문은 일본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인민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자신들이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처였다. 소련은 북한에서 많은 쌀과 산업시설을약탈했고 신의주, 함흥에서 대중 저항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착취와 억압

커밍스는 김일성이 소련의 계획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백히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면담 후에 북한에 들어왔고 소련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으면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1945년 10월 이승만이 미 점령군 사령관 하지가 옆에 앉아 있는 가운데 남한 대중에게 소개된 것처럼 김일성은 소련 관리들이 뒤에 서 있는 가운데 북한 대중에게 항일 영웅으로 소개됐다.

이렇게 소련군의 후원 속에 수립된 북한 정부는 남한과 다를 바 없이 대중을 착취 · 억압했다. 즉 노동자들의 생산 통제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지배 관료들의 통제만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남한보다 진보적인 북한이 남한 민중 해방을 위해 벌인 전쟁이 아니다. 실제 한국전쟁 중 북한의 남한 점령 지역에서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는 북한의 규율에 확실히 순응하게끔 북한 관리들이 빈틈없이 통제했다.

커밍스 주장의 또 다른 문제는 제국주의 경쟁이라는 맥락을 간과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진정한 원인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대 제국주의와 그들이 수립한 남북 정권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데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데이비드 하비 비판

자본주의를 개혁해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

김종환

데이비드 하비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학자로 세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내에도 《자본의 한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등 책이 여러 권 번역돼 있다. 하비는 또한 2017년 서울대학교가 대학 상업화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을 징계하려 할 때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런 하비가 최근 "자본주의를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19세기에나 가능했고 오늘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공산주의 몽상을 좇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알려져 파장을 낳고 있다.

발단은 그가 지난해 연말에 한 연설이다. 당시 그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핵심 모순'을 고찰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데 마르크스 시절과 달리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런 성장이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렇게나 비대해진 자본이 망하면 생산이 멈추고 그러면 음식과 같은 필수재 생산도 멈춰 문제가 된다. 마르크스 시대와는 달라진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 혁명가들은 자본을 잘 관리해서 그것의 파괴성을 약화시키고 이윤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30여 분짜리 이 연설이 지난해 말에 처음 업로드됐을 때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다. 그러다 며칠 전 외국의 한 블로거가 하비 연설 중 혁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대목을 편집해 SNS에 올리면서 영어권 활동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편집본이 아닌 전체 연설 영상을 봐도, 문제의 발언은 단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비 자신의 중요 결론이다.

이 연설로 하비는 자신의 이름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우선, 자본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구별하고, 가치증식과정과 노동과정을 구별한다. 가치증식과정과 노동과정은 생산을 각각 가치와 사용가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가치증식과정은 생산과 그 생산물을 판매한 결과로 투입물(노동력, 원자재, 기계)보다 더 큰 가치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노동과정은 원자재, 기계 각각의 사용가치가 노동력에 의해 변형돼 새로운 사용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분명 자본주의에서 두 과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타도한다는 것은 더는 가치증식과정을 중심으로 생산을 조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노동과정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공장을 장악하고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산하면 가치증식과정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같은 공장에서 노동력, 원자재, 기계를 결합해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과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하비는 생산수단이 가치증식 수단(자본)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만의 특징이라는 점을 망각하는 기초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 시대에는 자본주의를 타도해도 사람들이 스스로 식량 등을 자급할 수 있었으니까 혁명을 꿈꿀 수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몇 세대에 걸쳐 런던으로 밀려들어온 당시 영국 노동계급이 과연 하비 말대로 사회적 생산이 아니라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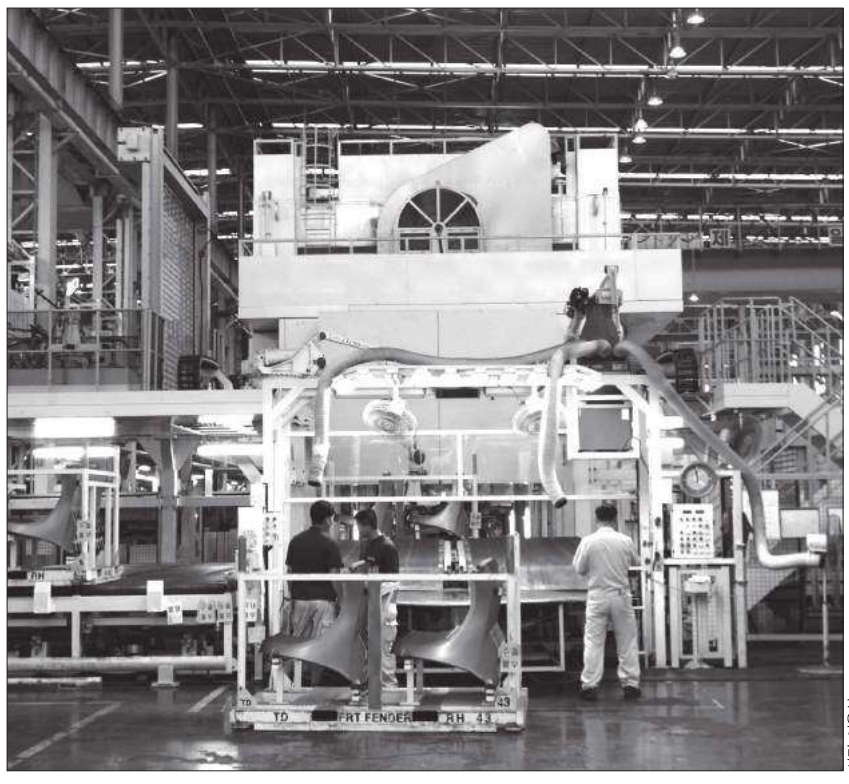
'자본이 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그의 발견은 '뒷북'이기도 하다. 이미 레닌과 부하린이 100여 년 전에 자본주의가 그런 지점에 도달했고 그런 질적 변화 탓에 전례 없는 규모로 전쟁이 벌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본지에 실린 《제국주의론》, 《제국주의와 세계경제》에 관한 서평 기사를 참고하시오.) 하지만 레닌은 하비와는 정반대의 주장, 즉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게 더 시급해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

하비와 같은 인물이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면서 잘못된 결론에 빠진 이유는 뭘까?

아마도 하비가 오래전부터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부정해 왔기 때문인 듯하다. 이 연설에서도 하비는 오늘날 반란은 작업장이 아닌 문제를 중심으로 벌어진다며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연설에서 하비는 자본이 하루아침에 타도되면 생산을 누가 조직하냐고 묻고는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자본을 타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을 중요시한 것은 바로 노동계급만이 작업장을 통제해서 사회 전체 수준으로 생산을 조직할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하비가 오랫동안 부정해 온 그 사실이 바로 지금 하비가 찾는 답인 것이다.

〈노동자 연대〉는 그동안 하비 책 서평들(《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이나 그의 방한 취재기를 통해 하비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이 "결정적 문제에서 엇나갔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



진보이 찬 사진

노동계급의 잠재력 코로나19 위기가 드러내듯이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존해 있다. 이런 객관적 조건 때문에 노동자 계급에는 자본주의를 멈춰 세우고 새로운 사회를 운영할 잠재력이 있다

결정적 문제

하비의 말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생필품을 모두 책임지려면 대단한 조직력이 필요하다. 하비는 자본주의를 타도하면 생산을 책임질 세력이 없다고 우려하지만, 여러 역사적 경험들은 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자본과 국가기구에 맞서는 대중적 조직(예를 들어 러시아혁명 시기에 소비에트)을 건설하며, 그 대중적 조직들이 또한 생산과 분배를 조직하는 데까지 나아가곤 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오히려 관건은 생산과 분배를 조직하는 대중적 조직이 등장하더라도 자본주의를 파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에는 그런 대중적 조직이 자본가와 기존 국가기구의 함정에 빠지고 그들의 역습에 결국 패배한 혁명의 사례가 많다. 반면, 대중적 조직이 반동을 꺾고 혁명에 성공한 사례는 1917년 러시아혁명뿐이다.

러시아혁명이 성공한 비결은 준비된 혁명적 정당(볼셰비키)이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1917년 2월 혁명 후 등장한 소비에트에서 여러 실천과 실험이 벌어진 끝에 대중의 다수가 볼셰비키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됐고, 그 덕분에 노동자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혁명적 정당은 소비에트 같은 조직이 등장하기 전에도 필요하다. 이 영상의 다른 부분에서 하비는 영상을 찍었을 당시 한창이던 각지의 반란을 거론하며 '대규모 시위는 그동안 많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운동이 파편적이고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고 옳게 지적한다. 그러나 문제를 포착은 했지만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넘어간다. 혁명적 정당은 그가 우려하는 운동의 파편화를 극복하고 대중적 조직력을 갖추도록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이 영상에서 하비는 당시 칠레에서 피녜라 정부가 반 년 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양보하자 많은 좌파들이 대안적 헌법 초안 작성을 위해 "단결"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당시 국민투표 실시는 투쟁의 김을 빼려는 정부의 꼼수였다. 이를 폭로하며 계속 거리에서 투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옳았다.

이처럼 대규모 운동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기로에 서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결정해야 한다. 옳은 결정과 그에 걸맞는 집단적 실천은 운동에 참여하는 대중이 스스로 전술과 전략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조직화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혁명적 정당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더 자세하게 설명한 글로는 크리스 하먼의 '자발성, 전략, 정치'를 권한다.)

하비가 나아가지 못한 곳에서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비의 연설과 정치적 약점을 반면 교사로 삼자.

▶ 9면에서 이어짐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구실이 강조되면서 일본은 구 지배질서를 재건했을 뿐 아니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냉전 시기 일본은 서방 진영 안에서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남한에서 지배자들의 묵인 속에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사 문제(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의 진정한 해결은 무시됐다.

남북 양쪽 지배자들은 상대방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끔찍하게 억압적인 착취체제를 만들었다.

상대방보다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급속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면서 대중의 삶과 정치적 권리는 남북 모두에서 바닥을 향해 경주해야 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남한의 첩자라는 죄목으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국가 주도의 급속한 자본축적을 해 나갔다. 북한의 이런 성장은 1970년대 자본의 국제화 경향이 우세해지면서 국가자본주의 방식의 축적이 위기에 처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됐다.

남한의 이승만은 지배 기반의 취약함 때문에 한국전쟁 이전부터 이미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대 내내 경찰 · 검찰과 같은 탄압 기구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지배계급이 원했던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었고 북한과의 경쟁에서도 밀렸다. 대중이 요구한 삶의 질 개선과 정치적 권리도 가져다 줄 수 없었다. 결국 이승만은 대중의 광범한 불만을 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통해 급속히 몸집을 불린 군부와 미국의 지지를 잃게 됐다.(1960년 4월혁명)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해방 직후 강력했던 좌파와 노동자 운동은 완전히 붕괴됐다. 좌파의 커다란 공백 속에 진행된 4월혁명은 이승만 제거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군부 쿠데타로 파괴됐다. 이후 반공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운 군부 지배는 30년이나 지속됐다. 이 기간 국가가 주도해 세계 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되는 방식의 급속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졌고 대규모 노동계급이 창출됐다.

해방 직후 존재했던 좌파는 미국(남한)과 소련(북한)의 대립이 낳은 강력한 진영논리 하에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지지를 얻어 독립과 한반도의 평화를 얻어내려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자체가 보여 줬듯이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급진적 · 혁명적 좌파가 남한에서 부활한 것은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친 이후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양 진영의 대립이 낳은 진영논리는 이때 부활한 좌파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의 원인인 제국주의는 오늘날 그 양상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간 경쟁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지 못한다.

예나 지금이나 제국주의(현재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포함한다)에 반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정치는 자본주의 위기의 책임을 대중에게 떠넘기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추천 책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김동철·김현옥·한규한 지음
책갈피, 280쪽, 13,000원

[근간]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최근 한국 현대사
—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김동철·김문성 지음
책갈피, 744쪽, 28,000원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초등학교 교사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5월 19일에도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예고됐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받으며 3일 만에 중단됐다.

두 법안 모두 아동 돌봄을 교육부 소관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아동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소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보장하고, 노동계급 자녀들이 방치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또, 이런 돌봄 서비스는 미래의 노동계급을 키우는 것이므로 마땅히 국가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특별법이 없을 때도 아동 돌봄은 ('초등 돌봄 교실'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맡아 주로 학교 안에서 제공돼 왔다. 그런데 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정부는 돌봄이 교육부 소관임을 명시하려 할까?

물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도 맞아 돌봄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돌봄을 교육부 소관으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문제는 정부의 어느 부처가 돌봄을 맡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양질의 돌봄을 위해 재원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 돌봄에 대한 재정 투자나 환경 개선,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번 특별법의 진정한 목적은 돌봄 업무의 일부를 정규 교사에게 떠넘기고, 현재 돌봄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를 더 악화시키는 데 있다.

사진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국가가 양질의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2018년 10월 20일 학교비정규직 초등돌봄노동자대회

코로나19와 책임 떠넘기기

최근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 시행된 긴급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학교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져 왔다.

돌봄전담사는 전혀 확충되지 않았고, 초등 돌봄전담사의 80퍼센트 이상이 시간제인 현실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미 오랫동안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전일제화를 요구해 왔는데도 말이다. 결국 긴급 돌봄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근무 시간을 강제로 변경하거나, 일부 정규 교사들이 돌봄 노동을 떠맡아야 하는 형태로 때워졌다. 긴급 돌봄을 위한 교실도 확충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도 불가능했다.

이렇게 코로나19 기간에 노동자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정부는 돌봄에 재정 투자는 늘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전에도 문재인 정부는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돌봄을 확대하려 했다. 이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정책을 내놓고, 2022년까지 돌봄 서비스를 학교에서 10만 명, 마을에서 10만 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돌봄 확대에 필요한 노동자 대다수를 이전 정부처럼 시간제로 채용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돌봄 업무의 일부를 초등 정규 교사에게 전가하려 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초등 저학년(1~4학년) 하교 시간을 연장(오후 3시까지)해 온종일 돌봄(저녁 7시까지) 중 일부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돌봄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며 교사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려 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새삼스레 특별법을 만들어 돌봄을 교육부 소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은 돌봄 확대의 책임을 학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우려를 살 만하다.

이번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봐도 돌봄 서비스의 질과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독소조항들이 많다.

우선, 특별법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온종일 돌봄을 총괄 운영한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돌봄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떠넘겼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돌봄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온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해 뒀다는 점이다. 보호자가 온종일 돌봄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가족 등을 온종일 돌봄의 우선 대상자로 설정해, 전업주부 등의 가정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주체가 교사인지, 돌봄 전담사인지 분명치 않아 노동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 소지도 충분하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추경 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교육 예산은 2조 원 가량 깎였고, 유아교육비 · 보육료지원 예산도 400억 원 넘게 줄였다. 공공부문에서는 내년 예산 10퍼센트 삭감을 위해 각종 임금을 깎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양질의 돌봄이 더욱 중요해졌는데도 교육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건대, 특별법이 통과한다 해서 돌봄에 대한 투자가 늘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은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돌봄을 교육부 소관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법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협상해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개악적 요소가 분명한 만큼 이런 법에 맞서 싸우는 것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더 유리할 것이다.

개악 투성이인 특별법에 반대하며 정규직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이 한목소리로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확대와 처우 개선, 돌봄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 2019년 3월 30일 개정

소피아 비치(의장)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바바 아이

야니스 델라톨라스

조셉 추나라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 ②

6월 13일(한국 시각),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을 주제로 공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소피아 비치**가 의장을 맡았고,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활동가 **야니스 델라톨라스**, 독일 디링케(좌파당) 소속 국회의원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나이지리아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바바 아이**, 영국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조셉 추나라**가 발제했다. 다음은 지난 호에 실은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발제 내용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내용이다. 영문 녹취를 해 준 이예송·천경록·한가은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소피아 비치(의장) 발제 중에 청중들이 보낸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나에서 기예키 타노가 보낸 것입니다. 연사들은 파업과 거리에서 분출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혁명적 사회주의자이자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투쟁과 선거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변화를 꾀하려면 의회나 노동조합에서 더 나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캐나다에서 펠린이 보낸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에 연대해 독일에서 대규모 행진이 열렸는데요, 이 시위는 미국 바깥에서 일어난 가장 큰 시위였다고 하죠. 펠린은 크리스티네에게 그런 시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국에서 토니가 보낸 것입니다. "런던 경찰은 오후 5시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특별법을 이용해 런던 도심에서 반(反)파시즘 시위를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 하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시위를 벌일 수 있을까요?" 런던 경찰의 통행금지령은 기가 막히는 소식이네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연사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국회나 국가기관이 아니라 자기 권익을 위해 싸우는 노동계급 운동과 사회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시위는 이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 임무는 정부 정책에 이의제기를 하고, 파시스트 의원들의 인종차별적 주장과 발언에 맞서고,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 투쟁하도록 고무하는 것입니다. 또, 독일 상황이 어떻게 다른 나라 상황과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예컨대 바바 동지가 말한 나이지리아 노동계급의 열악한 처지는 서구 국가들이 제국주의 경쟁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인데요, 독일은 서구의 중요한 경제적 · 군사적 일원입니다.

이처럼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일정한 구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핵심적 과제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뭉쳐서 자신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도록 고무하는 것입니다.

6월 7일 독일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사진 출처 Aufstehen gegen Rassismus

독일에서 어떻게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그렇게 거대할 수 있었냐는 둘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독일에서도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2월 19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소도시인 하나우에서는 총기 테러로 이주민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이자 파시스트인 범인은 국내의 인종차별 선동 연설과 [지난해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극받아, [무슬림이 많은] 물담배 바에서 사람들을 사살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이주민 공동체뿐 아니라 광범한 사람들이 인종차별과 나치에 반대하는 행동을 크게 벌였습니다.

좌파 야당

독일에서는 흑인과 무슬림을 겨냥한 인종차별이 흔합니다. 독일에서는 모스크가 일주일에 두 번 꼴로 공격을 당합니다. 사실 그런 공격은 날마다 벌어지지만 경찰에 신고해 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던 경험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독일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의 배경이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주 토요일 베를린 시위에 참가했는데 정말이지 장관이었습니다. 중앙 광장으로 사람들이 도처에서 밀려들어 왔습니다. 청년들이 많았고 한 눈에 봐도 미조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독일 내 인종차별이 심각한 만큼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인종차별과 파시스트에 맞서는 투쟁을 전진시키고, 미국뿐 아니라 독일 내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연대하려 합니다.

이 대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시위를 조직하는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많이 토론했습니다. 예컨대 5월 1일 메이데이 때 노조들이 온라인 시위만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아무 일정도 잡지 않길래 저희는 좌파당의 이름으로 작은 행동을 벌였습니다. 광장에 적은 수가 모여서 2미터 간격을 유지한 채 연설하고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메르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특히, 우익 야당들이 이미 있는 만큼 좌파 야당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리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운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일 많은 도시들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시위대는 2미터 간격을 유지한 채로 모여서 다른 도시까지 연결되는 인간띠를 만들기도 하고 연설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위 방식을 개발하려 합니다.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투쟁하도록 고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조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투쟁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런 투쟁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투쟁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바바 아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선거 정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우선, 크리스티네가 옳게 지적했듯이 변화는 의회에서 오지 않습니다. 심대한 구조적 변화는 언제나 사람들이 들고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거리에 있으니 언제나 선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거주의 정치는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선거에 개입해야 합니다. 사실 선거 정치에 직접 개입하느냐는 원칙 문제가 아니라 전술 문제입니다. 보통은 "어떻게"가 핵심이죠.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차악론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차악론, 즉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활한 궤변입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은 흑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교도소에 가두는 데에 핵심적 구실을 했습니다.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미국에서 재소자 수는 35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민주당원 빌 클린턴은 여기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 클린턴이,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유세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활동가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만방자하게도 '흑인들이 똑같은 흑인들에게 마약을 팔고 똑같은 흑인들을 죽이니까 교도소에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클린턴은 구조적 문제에 침묵했습니다. 흑인이 전체 인구의 6.5퍼센트밖에 안 되는데도 남성 재소자의 40퍼센트가 흑인이라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에 침묵했습니다. 클린턴은 대대손손 물려 내려온 빈곤을 애써 외면했고, 노예무역 이래 매 시기마다, 심지어 흑인 평등권 이후에도 흑인들, 특히 미국의 흑인 노동계급이 당해야 했던 인종차

노동자들의 합류는 항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6월 19일 오클랜드 항구를 멈춘 서부항운노조(LWU) 노동자들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사진 출처 Peg Hunter(플리커)

별을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투표소에서도 보여 줘야겠지만 투표소 바깥에서 그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대

시위의 국제적 확산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붙은 이번 항쟁에서 두 가지 쟁점이 부상했죠. 바로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보면, 이 시위들은 단지 항쟁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규탄하고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연대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여러 지역의 인종차별적 유산과 오늘날 벌어지는 인종차별을 들춰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원주민 권리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드니, 멜버른, 빅토리아에서 이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위대가 노예무역 상인들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는 영국의 전 총리 고든 브라운이 몇 년 전에 했던 망언에 대한 신랄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고든 브라운은 "영국이 식민주의를 사과해야 할 시기는 끝난 지 오래"라고 했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식민주의의 유산이 온존하고 있고, 인종차별은 식민주의 시기보다 더 이전의 대서양 노예무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민주의에 관해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가 맹공을 퍼붓기 전까지 아프리카가 이 정도밖에 진보하지 못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북아메리카와 유럽에는 복지 국가가 들어섰죠. 그러나 그때 아프리카는 여전히 식민지였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프리카에서 빠져나간 부가 당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를 건설하는 데 쓰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실들은 고든 브라운의 말이 왜 망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한편, 케냐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연대 시위에서는 경찰 폭력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위대는 아파르트헤이트[1994년 ANC 집권 전의 인종 분리 정책]의 공식적인 해체에도 불구하고 흑인, 특히 흑인 노동계급이 —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종종 경찰에게 살해당하는 —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 사실들을 연결해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더 철저하고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이루려면 노동계급이 새 세계를 위해 거리와 직장에서 대규모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그런 세계가 가능하려면 싸워야 합니다.

야니스 델라볼라스 정치인들에게 투표해서 인종차별적 폭력과 경찰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을 개혁할 수 있을지에 관해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발제에서 지적했듯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등장했습니다.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했던 구실을 감안하면 오바마의 대선 승리는 분명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인종차별적 살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운동의 요구를 외면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오바마에 환상이 전혀 없던 우리 같은 사람들도 경악할 정도였죠.

결국 오바마는 커다란 압력 때문에 어떤 조처를 취하긴 했지만 운동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오바마가 문제 해결에 그토록 무능했던 것 때문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생명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는 경찰 개혁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답하는 가장 분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음은 국가의 구실과 개혁 가능성이라는 더 큰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버니 샌더스는 경찰 예산 삭감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샌더스는 경찰이 상당한 예산을 받고 우수한 장비를 갖추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진보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 현재 운동[의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서는 또 다른 사례인 것이죠.

설령 경찰 개혁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경찰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살펴보면, 일선 경찰들 속에도 인종차별주의자, 심지어 네오나치 · 극우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찰 개혁은 어렵습니다. 인종차별이 고질병처럼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나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일선 경찰들 사이에 파시스트, 극우 지지자나 인종차별적 편견에 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은 명백히 고질병이죠. 인종차별은 경찰이 되면 받는 훈련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개혁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 번 양보해, 경찰을 개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파업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배계급은 경찰을 보내어 파업을 분쇄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이 하는 구실입니다.

조셉 추나라 시간이 없으므로 두 가지 요점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와중에 시위를 하는 문제입니다.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새로운 시위 방식을 개척하는 문제를 두고 운동 참가자들이 전술적 토론을 벌이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전술로 투쟁을 하든 그들에게 연대를 나타낸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위를 조직해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지배계급과 그 대변자들의 위선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들은 1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100명 이상이 모이는 일터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일터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좌파들이 집회를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6월 13일] 런던에 떨어진 통행금지령에 관해 특별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런던에 모인 극우파 시위보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를 더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확인시켜 주는 바는, 국가로 하여금 극우파 시위를 금지하게 하는 것으로는 극우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 조직자들은 토요일[6월 13일] 시위 일정을 금요일로 옮기기로 한 듯합니다. 같은 날 시위를 벌이는 파시스트들이 시위대를 공격할 것이고 정부가 이 사실을 이용해 흑인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듯합니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개진해야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파시스트들의 위협에 반격하려면 결국 거리, 직장, 지역사회에서 대중을 동원해 파시스트들의 집회 · 행진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전통은 1970년대 반나치동맹(ANL)에서 '파시즘에 맞서 단결하라'(UAF), '인종차별에 맞서자'(Stand Up to Racism) 같은 조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 노동조합 활동가를 비롯한 기층 활동가들이 대중 동원으로 파시스트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는 전통이었죠. 이러한 투쟁 방식은 이제 그리스 · 독일 · 오스트리아 등지로 퍼졌습니다. 제 생각에 이는 효과가 있는 투쟁 방식입니다.

이런 주장을 최근 급진화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개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와 투쟁

마지막으로 의회와 투쟁의 관계, 즉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문제와 거리 · 직장 · 지역사회에서 벌이는 싸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티네가 독일 연방의회 의원인 것은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티네는 천대받는 사람들의 호민관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네는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이를 위해 의회라는 연단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레닌이 의회에 관해서 한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레닌은 의회가 거대한 똥더미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올라서면 더 멀리까지 목소리가 들리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똥더미라는 데에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근본적으로 변화는 의회라는 기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의회를 우리 운동의 확성기로 활용하려 하고, 같은 목적으로 선거를 활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 궁극적으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투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일부 좌파가 의회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동등하게 놓는 것은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전통, 특히 그리스의 좌파 정당 시리자를 봅시다. 시리자는 5년 전 그리스에서 정권을 잡았죠. 많은 시리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급진좌파연합이다. 우리는 의회에서도 싸우고 거리와 작업장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요구를 외면했고 환멸을 샀다

사진 출처 NASA HQ PHOTO

에서도 싸운다. 모두 똑같이 중요한 투쟁이다."

그러나 집권 후 시리자는 거리와 직장에서의 투쟁을 의회와 선거주의의 필요에 종속시켰고,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하려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대중은 긴축 강요에 맞서 싸우라고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에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자는 자본과 유럽연합에 굴복해 되레 그리스 대중에게 긴축을 강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리자는 다음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선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의회와 선거 운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바바 아이는 "전술 문제"라고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대중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리 · 직장 · 지역사회에서 대중이 행사하는 힘에 기반을 둔, 의회 바깥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이 있어야만 우리의 집단적 민주주의를 사회에 관철시키고, 사회를 더 급진적이고 폭넓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피아 비치(의장) 이제 마지막으로 청중들의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답변하면서 정리 발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 익명의 한국인 청중이 보낸 질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단체가 시위를 조직하고 있습니까?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시위에 참가하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은 바바에게 온 질문입니다. 불평등이 극심한 나이지리아 상황에서 어떻게 운동을 건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국의 샐리가 보낸 질문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중국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여전한 것으로 압니다. 이 저항이 중국 본토로 번질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스웨덴에서 잉마가 보낸 질문입니다. 이번 토론 내용을 종합하는 훌륭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신자유주의 정치가 끝날까요?"

이번에는 역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셉 추나라 우선 중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현 위기의 한 가지 특징은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가 더한층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을 젖히고 세계 패권국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분명 세계 곳곳으로 힘을 뻗치고 있습니다. 미 · 중 간 긴장도 분명 엄청나게 높아졌죠. 현 상황과 관련해 알아야 하는 중요한 맥락입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일하는데 영국에는 중국인 학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거리에서 인종차별적 공격을 당하죠. 우리는 영국에서 중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 모든 인종차별이나 국수주의에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각국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연대 시위는 국내의 인종차별에도 반대하는 시위로 발전했다. 6월 20일 런던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사진 출처 STEVE EASON

현재 벌어지는 투쟁에 관해 말씀드리면,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항쟁은 중국 정부의 탄압에 맞서 일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광범한 투쟁입니다. 따라서 저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항쟁을 지지합니다.

물론 항쟁 내에는 상이한 조류가 있고, 그중 소수는 미국 · 영국 제국주의를 항쟁과 같은 편으로 여깁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탄압에 맞서 싸우는 광범한 대중의 운동에 우리는 연대를 나타내야 합니다.

가장 큰 희망사항은 탄압에 맞선 홍콩 대중의 격렬한 투쟁이 중국 본토의 투쟁과 어떤 식으로든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투쟁은 대체로 임금 체불 같은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투쟁이거나 직장에서 벌어진 전투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최근에 형성된 매우 강력한 노동계급이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가 1848년에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든 곳에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고 마르크스는 썼죠. 그리고 중국 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파묻을 매우 강력한 매장인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홍콩 등지에서 벌어지는 전투적인 정치투쟁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몇 년 동안 꽤 전투적으로 싸웠던 중국 노동계급의 막강한 힘이 서로 만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둘째,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2008~2009년 세계적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좌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대대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있으니 신자유주의는 끝났고 새로운 국면이 도래할 것이라고, 아마도 케인스주의식[온건한 국가자본주의를 가리킴] 개입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죠. 그런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08~2009년 위기 이후 긴축재정 정책들이 노동계급에 강요되면서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큰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요하는 것이 딱히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는 총리 보리스 존슨과 매우 지독한 우파 정권이 있지만, 보리스 존슨조차 대대적 긴축재정을 또 시행하면 선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본능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체제의 논리 때문에 노동계급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 부채 위기의 새 국면이 거론되고 있고, 체제를 구제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만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이는 향후 몇 년 간의 정치 상황에서 두드러질 특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실로 대규모 투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투쟁 없이 어떤 사회가 신자유주의와 근본적으로 단절하거나 더 진보적인 사회로 변화될지 모른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전투적인 투쟁이 절실합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제가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래 목격한 가장 희망적인 징후입니다. 1967년과 1968년의 위대한 반란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란들이 거대한 투쟁 물결을 촉발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974년 포르투갈 혁명, 1972년과 그밖의 영국 역사의 여러 시점에서 일어난 전투적인 계급투쟁, 혁명적인 물음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1968년 프랑스 총파업이 그 물결 속에 있었죠.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면, 100년 전 제1차세계대전 중에 폴란드 출신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던진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물음이 지금처럼 첨예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인류를 야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논리와 작동 방식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며, 인종차별과 온갖 다른 차별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이 체제의 모든 폐단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토론을 듣고 있고 우리 주장에 동의한다면, 여러분이 사는 나라에서 국제사회주의경향 단체의 활동을 찾아보고, 그 단체에 가입해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체제에 맞서 함께 싸우길 바랍니다.

바바 아이 나이지리아 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나이지리아에서는 파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국적 파업은 아니었지만, 여러 도시에서 간호사들이 파업을 벌였죠. 전국레지던트의사협회는 개인 보호 장비 지급과 수련의 교육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최후통첩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에는 '혁명연합' 같은 급진적 대중 단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그 이후의 생존을 위한 연합'이라는 단체도 생겼죠.

이런 단체들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저항을 지지하고, 나이지리아의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일련의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1월 경찰은 제가 몸담은 사회주의노동자연맹(SWL)의 회원인 알렉스 오부를 살해했습니다. 2주 전에는 17세 여학생 티나 에제퀘가 경찰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시위는 이런 사건들을 규탄했죠. 또,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성폭행도 규탄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 특히 성폭행이 코로나19를 배경으로 점증하는 사회적 병폐 중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거리에서 여러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의 파장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미 2019년이 대규모 투쟁으로 막을 내렸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지난해 8월 시위가 있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런 투쟁을 중단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열기는 근저에 있고, 이제 그 열기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막 터져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먼저 로자 룩셈부르크가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선택지를 제시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택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야만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야만적인 시대는 이제 우리를 낭떠러지 끝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과 과제에 대해 말씀

사진 출처 수원시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일터에 몰아넣고 있다. 집단감염의 위험 속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

드리자면, 위기는 역사적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2008~2009년 대침체와 1930년대 대불황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째서 1930년대 대불황 때 지배계급은 뉴딜 정책으로, 그것도 제2차 세계대전 개전 전부터 대응했을까요? 당시 자본가들은 노동계급과 일종의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8~2009년 대침체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더 과격해졌습니다.

전환점

제 생각에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단지 아래로부터의 저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30년대 대불황 당시에는 — 부정확한 형태로라도 — 자본주의 이후 사회라는 전망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가 가능한 선택지로 분명히 의제에 올라 있었죠. 그래서 영국의 한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에게 개혁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혁명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2008~2009년 대침체 때는, 특히 노동조합 관료[고위 상근간부층]이 기꺼이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출발점이 개혁이면 설령 뭔가를 얻어 낸다 해도 기껏해야 엉터리 약속이나 얻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전진할 수 있느냐는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느냐뿐 아니라, 대안을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하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기후 위기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요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직면해 지배자들은 그동안 이례적인 조처를 취해야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병원을 징발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자동차 공장을 개인 보호 장비와 호흡 보호구 등을 제작하는 용도로 재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되돌리는 것을 막고, 이런 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단편적 사실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상이한 투쟁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항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해서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시점에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배자들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주춤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사와 이론이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인간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단지 바리케이드에서뿐 아니라 현 상황을 해석하는 데에서도 최전방에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현 상황의 대안과 과제에 대한 가장 근원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업의 일부입니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자유주의가 끝날까요? 국가가 대대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 체계가 점점 '민영화'되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 노동 문제도 심각합니다. 단체교섭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신자유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겠지만 위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목표, 승리를 위한 정치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범좌파 정당들과 독일 [좌파당]에서도 정부에 참여하는 문제가 논쟁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참여한다는 관점이 정치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며칠 전 사민당 지도자가 '독일 경찰 내부에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좌파당 원내대변인은 '인종차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 전체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는 좌파당 내 우리 동지들은 물론, 독일 경찰에도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에게서 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좌파당이 참여하고 있는 베를린 시 정부입니다. 최근 베를린 시 정부는 지하철("S반") 운영을 공개 입찰에 부쳤는데 이는 지하철 '민영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반대를 조직하고 있고, 아주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구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고무하고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 기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되레 국가 기구에 스스로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 조직

마지막으로, 정치 조직으로 뭉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운동들이 부상하는 시기에는 경험을 공유해서 어떤 운동이 성공적이었고, 어떤 전략과 전술이 옳았고 틀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지금 독일에서는 유색인 등 인종차별을 겪는 당사자들이 조직화하고 그들이 거리에 나오도록 고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독일의 많은 좌파 단체들은 주로 백인들로 이뤄져 있고 무슬림의 참여는 그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그런 만큼 그들의 동참을 고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흑인과 백인, 무슬림과 무슬림 아닌 사람들이 단결해야 하고, 착취와 차별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노동계급이 나서야 한다는 우리의 전망 쪽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조직 안에서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 단체에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 운동의 경험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의 사회주의 운동과 급진적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그리고 많은 질문과 기여에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투쟁합시다.

사진 출처 Kelly Kline(플리커)

5월 30일 시애틀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야니스 델라톨라스 남한 동지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많은 시위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연대체가 조직했습니다. 여기 뉴욕에서는 경찰 병력을 지하철에 배치하는 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연합단체가 성공적으로 조직했죠. 경찰은 지하철에서 음식 등을 파는 흑인들과 이주민들을 단속하려 했습니다. 연합체의 이름은 적절하게도 '경찰은 꺼져라'였습니다. 그 방식은 다소 거칠었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시위를 조직했죠.

요즘 시위의 양상에 관해 말씀드리면, 예컨대 뉴욕시에서는 도시 여러 곳에서 온 시위대가 합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삼삼오오로 시작했다가 2~3만, 4만 명으로 늘어나는 식이죠. 워낙 정서가 광범하고 운동의 활력이 넘치다 보니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평소 시위가 열리는 광장에 나오면 저절로 시위대가 형성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연대체가 운동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미국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지배계급은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배계급은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원치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민주당이 신자유주의 후보[힐러리 클린턴]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 바이든을 후보로 내놓음으로써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지 않습니다.

기회와 도전

지금 상황은 모순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극우, 파시스트, 온갖 인종차별주의 쓰레기들을 부추깁니다. 이는 실질적 위험입니다. 뉴욕에서는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단결하자' 연대체가 여기에 맞서 싸워 왔죠. 제가 속한 '마르크스21'은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등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연대체 건설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극우가 이처럼 부상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사회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이 큽니다. 진보적 정서가 압도적이고, 인종차별 · 트랜스젠더 차별 · 성소수자 차별 · 이주민 차별에 반대하는 정서도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지배계급이 결코 대처할 수 없는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회주의자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 시기입니다. 전에 이런 운동을 조직하던 전통적 좌파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사회당(이하 DSA)은 매우 큰 조직이지만 좌파적 정당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SA는 한동안 집회에서 현수막을 들지도, 신문을 발행하지도, 운동에 개입하려 하지도, 공동전선을 건설하려 만만찮게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DSA 산하의 사안별 위원회에 들어오라는 식이었죠. 다행히 최근에는 DSA도 늦게나마 시위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21'은 이 운동에서 외향적 관점을 갖고 바깥 세상에서 조직을 건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전선의 방법을 적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마르크스21'은 신생 단체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이 영상을 보는 분이 있다면 저희에 연락해 주시고, 저희 단체에 가입해 주십시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그 나라에 있는 국제사회주의경향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꼭 가입해 주십시오.

다른 연사들이 모두 말했듯 지금은 매우 심각한 시기입니다.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지만 심각한 도전과 위협도 있습니다

출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유튜브 채널

녹취 김종환 · 이예송 · 천경록 · 한가은

번역 김종환 · 김준효 · 이원웅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트럼프 인종차별 몰이에 대규모 시위로 맞서다

김준효

6월 20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오클라호마주(州) 털사시(市)에서 대선 유세를 시작하며 인종차별 몰이에 나섰다.

이날 트럼프는 유세 연설에서 지지자들이 "정신 나간 좌파 깡패들"(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맞서야 한다고 선동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제 바이러스", "쿵플루"(쿵푸에 빗댄 인종차별적 표현)라고 비아냥거렸다.

트럼프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미국을 뒤덮는 지금, 노예해방기념일 다음 날, 흑인 학살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유세의 포문을 열었다. 털사에서는 100년 전 폭동이 벌어져 미국 역사상 손꼽히게 많은 흑인들이 살해당했다. 〈ABC 뉴스〉가 인용한 한 의원의 말처럼, "트럼프는 인종차별에 윙크를 보낸 정도가 아니라 귀향 파티를 열어 줬다."

그러나 트럼프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6월 22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35만 명을 넘어섰다. 2위에서 5위까지 나라들(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영국)의 확진자 수를 모두 더한 것과 비슷한 정도다.

경제 상황도 심각하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5월 말 현재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25퍼센트에 이를 것(이고 흑인 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이는 1930년대 대불황 당시 최고조(24.9퍼센트, 1933년)에 이르렀던 수준에 육박한다.

트럼프는 처참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바이러스 재앙에서 사람들의 눈을 돌리고 인종차별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

그러나 지배자들 일부는 트럼프가 미국 안팎에서 닥치는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하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트럼프를 맹비난해 화제가 되고, 권력층 사이에서 (미덥지 않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체재로 취급되는 배경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져, 바이든에 두 자리 수 퍼센트포인트 차로 뒤처지고 있다.

동력

미국에서 4주째 커지는 인종차별 반대 항쟁이 이런 파장의 동력이다.

〈USA투데이〉는 미국의 크고 작은 도시 1726곳(6월 19일 현재)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추산했는데, 열흘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6월 19일 노예해방기념일과 그 이후 주말에도 미국 전역 100곳 이상에서 100만여 명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대가 "이것은 인종차별에 맞선 봉기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사당 진입로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를 몇 시간 동안 봉쇄했다.

시위대는 첫 유세에 나선 트럼프에게 통쾌하게 한 방 먹였다. 애초에 트럼프는 자기 유세에 10만 명 넘게 참가할 거라 봤지만, 실제 참가자는 7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장외 행사도 취소됐다).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 팀 머토트는 "시위대가 대통령 지지자들에 겁을 주고 있다"고 투덜거렸다.

항쟁은 미국을 넘어 67개 나라로 번졌다. 유럽뿐 아니라 인구 압도 다수가 흑인인 아프리카에서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하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을 휴지조각 취급하고 온갖 차별과 천대로 내모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시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이유이자 연대가 절실한 이유다.

사진 출처 Annette Bernhardt(플리커)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는 대중 항쟁이 트럼프 같은 지독한 지배자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날 항만 노동자들도 작업거부 후 행진에 참여했다. 6월 19일 노예해방기념일 캘리포니아주(州) 오클랜드

경찰 개혁과 해체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

인종차별적 경찰을 바꾸자는 말이 미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6월 17일에 경찰 '개혁' 행정명령을 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경찰 개혁에 잠깐 신경쓰는 척했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은 경찰 재정을 늘리고 교육 ·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바이든을 적극 편드는 것은 운동의 요구를 거스르는 일일 뿐 아니라 대중의 변화 염원을 민주당 권력층 지지로 제약할 수 있는 처사다.)

그러나 역대 미국 정부는 경찰에 온갖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왔지만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가 그 핵심이었다('인권' 교육은 늘 뒷전이거나 쓸모 없었다). "지역사회 치안"을 명분으로 (주로 유색인종의) 위법 행위를 단속할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이 경찰에 부여됐다.

경찰이 검문 · 단속에 열심이고 무력 사용도 전혀 꺼리지 않는 것은,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사회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이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까닭은 경찰이 수호하는 체제가 그렇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본지 326호 '경찰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일까? 고쳐 쓸 수 있을까?')

흑인 대통령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이 점은 바뀌지 않았다.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이 폭증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경찰의 흑인 살해는 모두 오바마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운동의 압력

지금 미국에서 경찰 재정 삭감이나 "해체"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오직 운동의 압력 때문이다.

이 요구에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경찰 폭력에 수십 년 시달렸지만, 경찰 재정과 기반 자체를 건드리는 실질적 요구가 (구호 수준을 넘어) 부상한 적은 매우 드물었음을 상기해 보라.

경찰 재정을 삭감해 의료 · 교육 등 복지 예산으로 돌리라는 요구는, 이 운동이 경찰 폭력 규탄에서 시작됐지만 사회의 우선순위에도 문제 제기함을 보여 준다.('평범한 사람들을 돕는 데가 아니라 단속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쓰다니!')

그러나 재정 삭감의 정도와 용처에 관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있다. 최근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주로 민주당 시장들이 경찰 재정 삭감을 공언했지만, 실제로 복지에 가는 돈은 매우 적거나 불분명하기 일쑤다.

경찰 재정은 여전히 막대하다. 예컨대 삭감 후 2020년 뉴욕 경찰예산(60억 달러 이상)도 여전히 뉴욕 교육 예산 전체(약 34억 달러)의 두 배에 가깝다. 이런 재정은 최대한 삭감돼 대중의 진정한 필요에 맞게 써야 마땅하다.

"경찰 해체" 주장은 작은 변화조차 우물쭈물하는 권력층을 규탄하며 나왔다. 조지 플로이드 살해 경찰들 전원 기소조차 마뜩찮아 하는 미니애폴리스 시장에 대한 반발로 처음 부상했다.('그럴 거면 아예 해체해라!')

많은 미국 시위대는 경찰 중 일부만이 아니라 경찰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으로 경찰 해체를 외친다. 시경 당국이 임명하든, 연방정부가 임명하든, 심지어 선거로 선출하든, 경찰은 경찰이고, 그 인종차별적 본성은 "해체"하지 않으면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처럼,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경찰은 집단으로서는 없다. 경찰은 노동 대중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는 최전방 부대고, 그래서 지배자들은 경찰과 법 집행 기구 전체를 **정치적으로** 무장시킨다.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압박(이용)해 경찰을 실제로 해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이와 연관해 봐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체제 안정 · 수호를 위해 조직된 (무장한) 정치 조직이다. 그래서 그 존재 이유가 경찰(과 법 집행 기구 일체)로 직결된다(관련 기사 본지 118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한국에서도 국정원과 검찰 개혁 논란이 불거졌지만 권력 약화는커녕 간판만 바뀌거나 업무 이관 같은 조삼모사식 '개혁'에 그치기 일쑤였다.

자본주의 국가를 재정 삭감으로 해체할 수는 없다. 노동 대중의 혁명적 투쟁으로 이를 해체하고, 단결한 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통제하는 노동자 국가로 대체해야 한다. 그래야 인종차별적 경찰, 나아가 인종차별과 온갖 천대가 없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